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관세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기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2
- 기술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에 타격, 공급망 재편 및 무역 전략 변화 도모 움직임

₩ 경제통상 동향

- (규제) 트럼프 대통령, 수입산 반도체·의약품 대상 국가 안보 영향 조사 개시 4
- (관세)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일시적 유예 가능성 시사 5
- (WTO)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결의안 발의 6
- (핵심광물) 미국, 對중국 공급망 의존도 완화를 위한 심해 광물 행정명령 추진 7

⚖️ 의회법안 동향

- 의회 관세 권한 부과, WTO 기구 철회 등 3건 8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10

▣ 워싱턴 D.C. 주요일정

4.15(화)	• 3월 수입 가격지수(Import price index)
4.16(수)	• 3월 미 소매 판매(U.S. retail sales)
4.17(목)	• 4월 둘째 주 초기 실업수당 청구(Initial jobless claims)
4.18(금)	•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발언(San Francisco Fed President Mary Daly speaks)

◎ 워싱턴 포커스

(관세정책)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기술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는 미국 기술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상호관세는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지해 온 기술 기업들에게 타격을 줄 전망
 - 중국(125%), 대만(32%), 베트남(46%) 등 주요 기술 제품 제조국에 부과된 고율 상호관세로 반도체와 첨단 기술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주요 영향으로 △생산 비용 증가, △소비자 가격 인상, △공급망 혼란, △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 위축, △보복 관세 위험 등 전망
 - 지난주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일시 면제 발표(4.11)로 큰 타격이 예상되었던 기술 관련 기업들은 일부 완화를 기대하며 안도감 표명
 - * 스마트폰, 랩탑, 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반도체 장치, 통신장비, 메모리 칩 및 평판 디스플레이 등 포함 20개 HS Code에 달하는 광범위한 전자제품([☞ CBP 링크](#))
 - 특히 중국 내 생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 애플(Apple)*을 포함해 델·엔비디아 등 기술 대기업 및 기술주 투자가들은 면제 조치 환영
 - * 중국·대만 전자제품(125% 관세)도 면제에 포함, 애플은 아이폰의 90%, 아이패드의 80%, 맥 컴퓨터의 55% 등 80%에 달하는 제품을 중국에서 생산 중
 -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릭 상무장관은 발표 이후 전자제품 관세 면제가 일시적임을 강조하며, 조만간 발표될 반도체 관세 조치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해 업계 전반에 관세 불확실성 가중
- * 동 관세 면제 조치는 2024년 전체 수입액의 약 12%인 약 3,850억 달러 상당

□ 관세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 및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① 생산비 상승 및 소비자 가격 인상 압박

- 중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 저비용 생산에 의존하는 미국 첨단기술 및 반도체 기업들은 생산·조달 및 수입 비용 상승으로 가격 인상 압력에 직면

② 공급망 불안정 및 불확실성 직면

- 관세정책 혼선으로 신속한 경영 판단을 내려야 하는 기술 기업들은 단기적 대응이 어려운 글로벌 공급망 체계에서 구조조정 비용과 불확실성에 직면

③ 기술주 주식 변동성 확대 및 투자 심리 위축

- 관세 불확실성으로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등 주요 기술주 및 마이크론, HP, 델 테크놀로지 등 다수의 반도체 및 개인용 컴퓨터 관련 기업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며 투자 손실 및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 위축 초래

④ 보복 관세 가능성

- 유럽연합(EU) 회원국 등은 메타, 알파벳(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미국 기술 대기업을 겨냥한 보복 관세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미국 수입품 대상 125% 보복 관세 발표

⑤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한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 및 무역 전략 변화

- 기업들은 관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중국 의존도 축소, △생산국 다각화, △미국 내 제조시설 이전 및 투자* 등 추진

- * ① 애플, 미국 내 투자 ② 오픈AI, 오라클, 소프트뱅크, 미국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설립
③ 엔비디아, 미국 내 AI 칩 및 슈퍼컴퓨터 제조에 각각 5,000억 달러 투자 발표

-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칩, 스마트폰, 노트북과 같은 핵심 기술 제조를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강조하며, 기술 기업들의 미국 생산 이전 촉구

- *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24년 미국의 수입 1위 품목은 중국산 스마트폰(417억 달러), 2위는 중국산 노트북(331억 달러)으로 추정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The Hill(4.15 , 4.4), 뉴욕타임스(4.13), 폴리티코 분석(4.11) 등 현지 언론 취합



(규제) 트럼프 대통령, 수입산 반도체·의약품 대상 국가 안보 영향 조사 개시

- (개요) 美 상무부, 반도체·의약품 국가 안보 영향 조사 개시 발표(4.14)
 -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2025년 4월 1일부로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식 조사를 개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요청
 -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 외국 무역관행 대응 목적으로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 가능
 - * 상무부는 5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70일 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 대통령은 90일 내 조치 결정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으며,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르면 1~2개월 내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 (상세) 광범위한 조사 대상과 관세부과 우려에 업계 공급망 혼란 및 비용 상승 우려 증폭
 - (반도체) 기판(substrate), 웨이퍼(bare wafer), 범용(legacy)·최첨단 반도체, 미세전자(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및 부품,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제품 등 파생제품 대상
 - * 관세 부과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불명확(완제품 전체 부과 vs. 해당 완제품 내 수입산 칩에만 적용)
 - (의약품) 완제의약품(제네릭·비제네릭), 원료의약품(API), 백신, 항생제, 의료 대응책(medical countermeasures), 주요 원료 및 파생제품 대상
 - △ 미국 내 수요 및 생산능력, △ 국내 생산 확대 가능성, △ 외국 공급망 의존도, △ 소수 공급업체 집중 위험, △ 외국 정부 보조금, △ 불공정 무역관행, △ 수출통제 가능성, △ 관세·쿼터 등 수입 제한 필요성 등 이해 관계자 의견 요청
 - 업계는 자국의 제조업 활성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광범위한 관세 부과 시 공급망 혼란과 비용 상승 초래 우려, 단계적 도입과 일부 품목의 예외 적용을 정부에 요청 중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반도체 관보(링크), 제약 관보(링크), 폴리티코(4.14), 블룸버그(4.14), 인사이트(4.14)

(관세)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일시적 유예 가능성 시사

- (개요) 트럼프 대통령, 자동차 관세 일시적 면제 검토 및 정책 불확실성 지속

-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기업이 미국 내 제조 설비 구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 자동차 및 부품 관세에 대해 일시적 면제를 검토 중이라고 언급(4.14)
- 자동차에 대한 관세 유예 또는 인하 기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보류
-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완성차 제조업체에게 일시적 안도감을 제공할 수 있으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

- (상세) 자동차 관세 본격화로 소비자 부담 증가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으며(4.3),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늦어도 5월 3일부 발효될 예정
-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된 관세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에서 규정한 미국산 부품 함량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 관련 예외 조항 포함
- 포드, GM, 스텔란티스는 완성차 및 대형 부품*에 대한 관세는 수용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
* 엔진과 변속기 등
- 시장조사업체 앤더슨 경제 그룹(Anderson Economic Group)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첫 해에만 약 30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
- 또한, 일부 수입 고급 차량 가격은 최대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으며, 미국산 부품 비중이 높은 저가 차량도 2,500~4,500달러 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경현
▪ 자료원	블룸버그(4.14)

(WTO) 공화당 하원의원,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결의안 발의

- (개요) 톰 티파니 하원의원(R-WI)은 4.11일 미국의 WTO 탈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 하원 세입위원회(Ways and Means Committee)에 회부
※ 상원에는 아직 동반 결의안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
 - 티파니 의원은 WTO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과 인권 유린을 간과하고,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를 해치며,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무역정책은 제네바의 국제 관료가 아닌, 미국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인사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WTO 대신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무역체제 필요성을 강조
- (상세) 이번 결의안은 '05년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WTO 탈퇴 결의안
 - 미 의회는 WTO 가입을 승인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Uruguay Round Agreements Act)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 보고서를 바탕으로 5년마다 탈퇴 여부 검토 가능
 - 과거에도 유사한 결의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모두 의회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WTO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며, 대외 원조 전반에 대한 검토의 일환으로 WTO 분담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
 - 다만 USTR은 제네바에서의 협상에는 계속 참여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WTO 대사로 1기 당시 USTR 법률 고문이었던 조셉 바룬(Joseph Barloon)을 지명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수나
■ 자료원	인사이트(4.11)

(핵심광물) 미국, 對중국 공급망 의존도 완화를 위한 심해 광물 행정명령 추진

- (개요) 트럼프 행정부, 태평양 해역 심해 광물의 전략적 비축 방안 검토
 - 트럼프 행정부는 니켈·코발트·구리·망간 등 배터리·전선·군수품에 활용되는 다금속단괴(polymetallic nodules)*를 국가전략물자 비축 대상에 포함하는 행정명령 추진
 - * 태평양 심해저의 고압·저온 환경에서 형성된 금속으로 희토류 대체 자원으로 부상
 - 알렉산더 그레이 前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은 “중국은 심해를 미·중 경제·군사 경쟁의 전선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며, “심해 광물 확보는 미국의 전략적 대응”임을 강조
- (상세) 미국 내 채굴·경제 병행 추진을 통한 전략자원 공급망 자립도 제고
 - 행정명령 초안은 다금속단괴를 기준 국가전략 비축 체계(원유, 금속 등)에 추가하고, 미국 내 채굴·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 포함
 -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간 무역 갈등 및 희토류·핵심 광물 수출통제 등으로 인한 공급망 충격에 대비해, 미국 영토 내 ‘전략적 자원 비축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
- (반응) 국제사회, 국제 규범 미비 및 생태계 훼손 우려에 따른 신중론 제기
 - 미국은 유엔 해양법협약(UNCLOS) 미비준으로 국제해저기구(ISA) 정회원국이 아니며, 이에 따라 국제수역 광물 채굴의 법적 근거 및 ISA 규제권 해석을 둘러싼 이견 지속
 - * 중국, 러시아 등은 미국의 비준 거부 상태에서 심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 표명
 - 국제사회는 심해 생태계 훼손 및 인도네시아산 저가 니켈 대비 채산성 확보의 한계 등을 근거로, 심해 광물 채굴의 환경적·경제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신중론 견지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파이낸셜타임스(4.12), 로이터(4.14)

▣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제3자 미소 기준 수정 (4.11)	S.1425 (상) (4.11)	Bill Cassidy (공)	<p>〈외국 오염 수수료법 (Foreign Pollution Fee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자 결제 기관의 미소 기준 지급 예외를 수정하기 위한 1986년 내국세법 개정
의회 관세 권한 부과 (4.10)	H.R.2888 (하) (4.10)	Linda Sanchez (민)	<p>〈대통령의 무역 무례 행위 중단법 (Stopping a Rogue President on Trade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 권한에 따라 부과된 특정 관세 종료 유사한 관세 부과는 의회의 승인 요구
WTO 기구 渤회 (4.10)	H.J.Res.93 (하) (4.10)	Thomas Tiffany (공)	<p>〈공동 결의안: WTO 기구渤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설립 협정 승인을渤회한 공동 결의안

* 미국 동부 시간 4월 15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p>Trump's Trade War Deepens Threat to U.S. Brands in China (무역전쟁 심화...中 시장 내 美 브랜드 생존 위기)</p> <p>미중간 무역전쟁이 심화되며, 중국 시장 내 미국 브랜드 점유율은 급감하고 있어. 나이키의 중국 시장 내 분기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3월 테슬라 판매량은 12% 감소하는 등 미국 상품은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p>
The Washington Post	<p>DOGE is collecting federal data to remove immigrants from housing, jobs (정부효율부, 불법 이민자 단속 위해 연방 데이터 수집 중)</p> <p>정부효율부는 서류미비 이민자 단속을 위해 정부 데이터를 수집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기에는 이민자들이 납세, 주택 임차 등과 관련해 수년간 보고해 온,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정보가 포함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기</p>
The New York Times	<p>More Than 20,000 I.R.S. Employees Offer to Resign (美 국세청, 2만명 이상 자발적 퇴직)</p> <p>미국 국세청은 신정부 출범 전 약 10만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정부 효율화의 일환으로 해고와 퇴직 권고가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약 22,000명의 직원이 퇴직 제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해 국세청의 징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p>
CNN	<p>Trump administration looking at closing nearly 30 overseas embassies and consulates (트럼프 행정부, 30여개 해외 대사관·영사관 폐쇄 검토 중)</p> <p>CNN이 입수한 국무부 내부문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화의 일환으로 몰타, 룩셈부르크, 콩고 등 30여개의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을 폐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p>
USA Today	<p>Trump threatens to revoke Harvard's tax-exempt status in escalating feud with Ivy League school (트럼프, 하버드대 면세 지위 박탈 위협)</p> <p>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대가 계속해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이며 테러리스트의 영감을 받거나 지지하는 '질병(Sickness)'을 추진한다면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면세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위협해</p>

* 미국 동부 시간 4월 15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5-11	2025년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4월
US25-10	美 USTR의 중국 조선업 무역법 301조 권고 조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04월
US25-09	202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Report) 주요 내용	2025.04월
US25-08	'미국 우선 투자 정책' 대통령 각서 발표 및 주요 내용	2025.04월
US25-07	미일 정상회담, 안보 및 경제 협력을 통해 동맹 강화	2025.02월
US25-06	美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부과 조치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5	美 하원에 발의된 '미국 상호무역법안' 상세 내용 및 시사점	2025.02월
US25-04	미 하원, 공정 무역 회복법(Restoring Trade Fairness Act) 발의	2025.02월
US25-03	'디지털 금융 기술에서의 미 리더십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5.02월
US25-02	2025년 글로벌 경제·통상 정책 전환과 주요 일정	2025.02월
US25-01	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	2025.01월
US24-47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글로벌 무역 동향 보고서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6	미 2050 원자력 3배 확대 로드맵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4.12월
US24-45	美 상무부 반도체 장비·고대역폭메모리 수출통제 조치 주요 내용	2024.12월
US24-44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정책 변화에 따른 업계 영향 전망	2024.12월
US24-43	현지 언론이 평가한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과 향후 전망	2024.12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1 (2025.2.8.)	 워싱턴 특파원이 알려주는 미국 경제 통상 핵심 키워드	
코인사-20 (2024.12.23.)	 SelectUSA 대표가 들려주는 한-미 투자협력 현황 및 전망	

문의	이메일	전화
	seogil.chang@kotra.or.kr	
	jwshim@kotra.or.kr	+1) 202-857-7919